




대전시 공적돌봄의 현황과 과제 (2회차, 가족·돌봄분야)

2022년 8월 31일(수)
10:00 ~ 12:00

- 주최**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 주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성인지 정책 포럼》

『민선 8기, 대전시 성평등 추진체계의 현실과 대응방안』

- 주 제 대전시 공적돌봄의 현황과 과제 (2회차, 가족·돌봄분야)
- 일 시 2022년 8월 31일(수) 10:00 ~ 12:00
- 장 소 대전광역시청 5층 창의실
- 참석자 유관기관 종사자 및 대전시,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진 등
- 주 최 대전광역시 · 대전세종연구원
- 주 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 진행순서

시 간	소요(분)	행사내용	비 고
10:10~11:40	90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 이연복(우송정보대학 교수) ▷ 토론 - 양승연(대전광역시 아동복지협회 회장) - 이옥주(대전광역시 장애인부모회 회장) - 김혜영(대전광역시가족센터 센터장) - 장진경(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 단장) - 홍은미(대전광역시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박종화(대전광역시 복지여성특별보좌관)
11:40~12:00	20	질의응답	▷ 참여자 간 자유로운 질의응답
12:00~		마무리	▷ 포럼 종료



Contents

1. 아동양육시설의 돌봄현황 및 과제 [(사)대전광역시아동복지협회]	01
2.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	05
3. 서로 함께 돌보는 돌봄체계 구축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08
4. 아동이 행복한 나라, 아동이 행복한 마을 [지역아동센터대전지원단]	14
5. 대전형 아이돌봄 지원체계와 제안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손·오·공]	18
6. 민선8기 대전 돌봄 정책 방향 [대전광역시 복지여성특별보좌관]	21



아동양육시설의 돌봄현황 및 과제

[사]대전광역시아동복지협회

1 기관 개요 및 현황

- 기관명 : (사)대전광역시아동복지협회
- 설립목적 : 아동복지시설의 발전과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시설아동 및 지역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아동양육시설 현황

<표 1> 대전광역시 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 (단위: 명)

시설명	보호아동 수			보육사 수
	총원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구세군 대전혜생원	38	4	2	18
늘사랑 아동센터	42	0	16	20
대전 자혜원	30	3	7	18
돈보스코의 집	9	2	0	7
성심원	32	7	3	14
성우 보육원	43	4	6	17
정림원	30	3	0	13
천양원	33	2	14	19
평화의마을 아동복지센터	31	3	10	17
후생학원	42	8	0	17
	330	36	58	160

※ 경계선지능아동에 미취학아동은 포함되지 않음

○ 보호아동 발생 현황

<표 2> 대전광역시 보호아동 발생 현황

(단위: 명)

구분	부모빈곤·실직	학대	부모질병·사망	부모교정시설 입소	부모이혼 등
2020년	12	81	17	8	11
2021년	2	62	13	3	13

2 문제 분석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육시설에서 돌봄 대상이 되는 보호아동은 0세 영아부터 24세 청년까지로, 입소후 장기 돌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 2016년 3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원가정 보호 원칙을 명시(4조),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양육 상황 점검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책무 강조(15조, 16조 등). 이러한 법 개정은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반영한 것
 - 원가정 복귀 지원에 공공의 책임을 강조하나 양육시설과 통합서비스체계 없음
 -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라고 명시 되어 있어 원가정 복귀를 위한 양육시설 보호아동과 원가정과 관계개선 등을 위한 지속적· 체계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02년 아동양육시설 2교대 제도에 따른 시설내 변화를 연구한 논문(권지성외 2006) 따르면, ① 종사자의 주인의식이 부족해짐 ② 아동들과 애착 형성이 더 어려워짐이라는 돌봄의 딜레마를 지적
 - 2021년부터 아동양육시설 3교대 제도 변화로 주양육자가 이틀에 세 번 바뀌게 됨으로 인해 위와 같은 문제가 더욱 심화된 상황

- 2007년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에서도 통합보육을 통해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경계선 아동에게 부모와 같은 양육자의 역할과 더불어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현재 대전광역시 양육시설 내에서 보호 중인 아동 가운데 11%가 장애아동이며, 18%가 경계선지능아동임<표 1 참고>.
 - 시설 내 거주 아동 중 장애아동 및 경계선 지능아동의 수가 높은 이유는 학대 및 방임 등으로 발달이 지연된 상태로 시설에 입소되기 때문
 - 통합보육의 가치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원이 부족한 통합보육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 발생 : 특화된 장애아동 프로그램 부족, 보육사의 전문성 부족 관련 어려움 발생

- 코로나 대응 방역 지침과 관련 일반가정의 아동들은 대국민 방역 지침하에 보호자와 외출, 여행, 레저 등을 누리는 반면, 시설 거주 아동들은 정부의 관리 대상
 - 코로나19로 재택학습이 진행될 때, 개별 PC의 부족 및 방역지침에 의해 보충 학습의 기회를 제한받아 결국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는 결과에 놓임
 - 또한, 코로나19 이후 돌봄에 소요되는 에너지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이선형외, 2021)는 연구 결과에 비추어 양육시설에서 아동 돌봄에 소요되는 에너지는 일반가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과중. 이동제한으로 인한 과중된 돌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돌봄 종사자의 몫
 - 시설 종사자의 코로나 확진일 경우 돌봄 공백이 상당했음

- 법무부 교정본부에 의하면, 2018년 기준 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1,209명이었다. 이에 지자체와 지역사회(아동양육시설 등)과 연계하여 아동을 보호 지원하기로 하였음 수용자의 자녀는 부모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인 낙인 등에 심리적인 문제를 겪을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

- 일시보호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아동학대로 즉각분리된 아동이 일시보호시설의 부재로 각 아동양육시설에 보호 의뢰되고 있는 상황
 - 기존 보육사들에게 돌봄 노동 강도가 더해짐으로 인한 불만
 -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도 낯선 아동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심리적인 불안감을 토로
 - 일시보호 아동과 장기보호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체계는 개별화 원칙에 따라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제공에 한계
 - 일시보호 아동의 보호는 비공개원칙이나 양육시설은 노출되어 있는 개방된 시설로 종사자와 아동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아동의 모가 시설 방화 사건 발생)

- 근로기준법의 변화, 코로나 상황 등과 같은 비상상황, 예측 불가능한 아동입소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설 내에서의 돌봄 공백이 없이 인력을 가용할 수 있는 상시 인력 필요(최소 1인)
- <표 1>과 같이 시설 내 거주하는 아동 중 장애아동 및 경계선지능아동의 효과적인 통합보육을 위한 일상생활 및 학습과 관련된 전문적인 돌봄이 너무나 절실(전국기준 183개소, 659명)
- 일시보호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
- 아동양육시설에 입소 후 아동은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화된 사회복지서비스 필요
- 결국, 다양한 입소배경을 가진 보호대상 아동을 개별화한 맞춤형 돌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원가정 보호 원칙을 명시(4조)했다면 보호아동에 대한 돌봄 기준과 방향을 정립하여 입소시부터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아동들에게 종종 원가정 만남을 통해 집에서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면 ‘그냥 핸드폰 했어요. TV 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원가정-아동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데 원가정 복귀는 가정외보호를 종료하고 단순히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
- 원가정 사례관리와 원가정과 아동의 관계 개선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아동 입소와 동시에 원가정 지원(사례관리)을 통해 철저한 사정, 전문적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내 지지체계 마련, 장애물 제거 등을 목표로 최종적으로는 아동이 성공적으로 원가정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성공적 원가정 복귀 : 영국의 NSPCC(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의 재결합 연구는 8가지의 원가정 복귀 성공 요인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①케이스 히스토리를 포함하여 철저한 사정 ②원가정 복귀를 위한 충분한 준비를 부모와 아동에게 제공 ③부모와 아동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 ④ 시설 종사자가 원가정 복귀를 위해 부모 및 아동과 함께 활동하고 이들을 지지, 그리고 이후에도 부모 및 아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⑤애초에 분리를 야기했던 문제를 다루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원가정으로 돌아감 ⑥원가정 복귀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공적 ⑦부모와 아동에 대한 일관적이고 목적적인 사회사업과 모니터링이 있음 ⑧부모가 달라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

1 기관 개요 및 현황

- 기관명 : 한국장애인부모회 대전시 지회(대전광역시 장애인부모회)
- 사업 개요
 - 사업명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돌봄 서비스와 휴식지원사업으로 구분
 - 취지 : 다른 서비스가 당사자를 위한 지원인데 비해 이 서비스는 가족의 돌봄 부담 감소와 가족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
 - 대전시장장애인부모회는 2007년부터 시행기관으로 선정
 - 주요 내용 :
 - ✓ 대상 : 18세 미만 심한 등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 ✓ 연간 960시간(월120시간) 이내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양육 돌보미 파견
 - ✓ 중위소득 120% 초과인 경우에는 이용금액의 40% 본인부담
- 사업 현황(2022. 8.기준)
 - 돌봄 서비스 이용자 : 172명(12세 이하가 163명, 94%)
 - 돌보미 : 222명
 - 돌봄제공자는 50대 이상 여성의 비율의 68% 정도임.

2 문제 분석

- 돌봄 이용자의 입장
 - 장애 미등록 상황이거나, 경증 장애인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됨.
 - 양육 부담과 소득 기준은 별개의 문제이나 중위소득 120% 초과자가 월80시간을 이용할 자부담금이 약360,000원으로 부담스러운 수준임.(활동지원의 경

우 최대 부담금 약165,000원)

○ 돌봄 제공자의 입장

- 돌봄 제공 단가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시간당 9,160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동차 운행 비용 등은 별도 지급되지 않음.

○ 수행기관의 입장

구 분	양육지원	활동지원
지원대상	가족 지원	당사자 지원
급여기준	연960시간(월80시간)	월43~107시간 + 추가급여
제공단가	9,160원/시급	약11,100원/시급 (기관별 사업비 등 제외한 금액)

- 18세 이하의 장애아동 또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당사자 지원 의미보다는 가족돌봄 지원의 취지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량의 차이 때문에 6세 이후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호함.
- 장애아동 돌봄은 전문지식, 인성, 자질 등에서 더욱 전문적 소양이 요구되거나 급여 및 처우가 열악하여 인력 확보가 원활하지 않음.

○ 정책상의 문제

- 장애인의 경우 시설돌봄은 탈시설 정책 등으로 계속 축소되는 추세이며 지역사회 돌봄으로 대체됨. 그러나 지역사회에 돌봄의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탈시설정책은 가족돌봄의 부담으로 가중됨.
- 장애의 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돌봄 단가로 인해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 장애인/장애아동이 더욱 돌봄 받기 어려운 모순이 발생함.

3 필요 개선안

○ 가족돌봄 책임성에 맞는 가족지원

- 아동, 장애인, 노인은 대표적인 돌봄 필요 영역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돌봄의 기간이 매우 길고,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은 공적 돌봄에서 소외되어 가족이 돌봄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 가족이 돌봄을 담당하는 경우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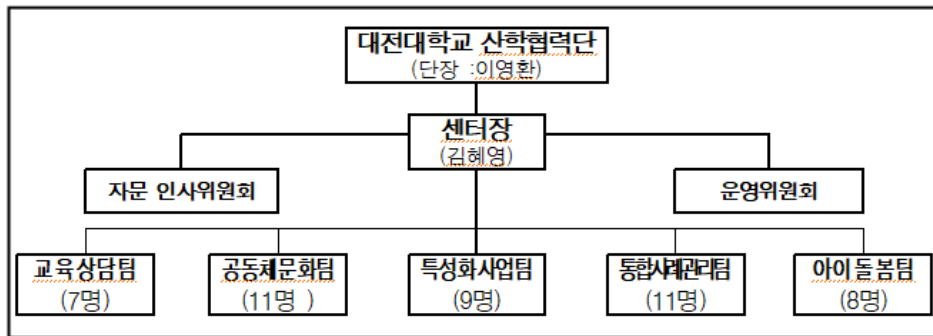
- 돌봄 노동 전문성 인정
 - 성인 발달장애인/장애아동 돌봄 노동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에 걸맞게 처우하려는 인식과 정책이 필요
- 돌봄 제공자의 성비 불균형 및 고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인책 필요
- 장애정도/소득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꼭 필요한 경우 돌봄 이용 시간에 대한 기준 완화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 현재는 연 960시간 이상 이용 시 시간당 11,280원을 자부담 해야 함.
- 홍보와 연계
 - 장애 진단과 동시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정비 및 홍보

서로 함께 돌보는 돌봄체계 구축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1 기관 개요 및 현황

- 설립목적 :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문제예방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생애주기별 가족생활 지원
- 설립근거 : 「건강가정기본법(’05.1.1. 시행)」, 「다문화가족지원법(’08.9.22. 시행)」
- 수탁기관 :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 조직인력 : 상근직원 - 47명, 비상근직원 - 280명



- 주요 사업내용 :

구분	사업내용
교육상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개선, 가족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가족상담사업: 가족 내 다양한 갈등을 해결을 위한 개인, 부부, 가족상담 진행 ■ 1인가구지원사업: 정서 및 심리지원, 생활교육, 문화체험, 사회적 관계망 지원 ■ 아버지역할지원: 가정 내 아버지역할지원,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법 등에 대한 지원 ■ 부모역할지원: 생애주기 및 가족특성에 따른 부모역할 정보제공 및 역량강화 지원 ■ 부부역할지원: 부부의 생애주기에 따른 양성평등한 부부역할지원 ■ 집단면접교섭서비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또는 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다문화가족 학령기자녀 및 부모 관계향상, 사회성·리더십 개발 등 맞춤형 프로그램 ■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지원: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가정 내 문제, 학업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

<p>공 동 체 문 화 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운영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취업기초소양교육, 직업탐색, 자격증반, 취업처 연계 ■ 맞벌이가정일가정양립지원: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하여 가족 간 상호작용 향상 ■ 가족봉사단: 가족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으로 봉사에 대한 긍정적 영향 확산 및 공동체 문화 조성 ■ 가족사랑의 날: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 ■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운영: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역사회통합프로그램, 자녀돌봄 지원 ■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 지역사회에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결혼이민자의 정착과정 설계, 내적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탐색 ■ 공동육아나눔터: 양육정보공유 및 공동육아를 통한 가족기능 강화 ■ 돌봄공동체: 마을 공동체 지원 및 돌봄공동체 활성화 도모
<p>특 성 화 사 업 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장기·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방문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실시 ■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발달 교육, 평가, 부모교육 및 상담 추진 ■ 통번역지원서비스: 정착초기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지원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 자녀가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 동시에 배울 수 있도록 지원 ■ 결혼이민자역량강화지원: 실용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습욕구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사업: 대전 내 네트워크 형성, 다문화소식지제작, 다문화화합한마당 등 ■ 다문화가정 임신·출산 지원을 통한 초기양육환경 조성사업(소풍) · 찾아가는 임신·출산·육아체험관 , 맘스코치(임신·출산·육아 전문가 양성)
<p>통 합 사 례 관 리 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를 통한 취약·위기가족의 복합적 문제해결 및 가족기능 회복과 자립역량 강화 ■ 가족사례관리: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긴급위기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자녀학습·정서지원,생활도움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청소년부모 대상)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청소년부모 대상) 법률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구 미혼모·부초기지원사업):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초기위기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도모 정서지원, 지역 자원연계,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친자검사비 지원, 출산 및 양육지원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 다문화가족의 욕구해소 및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연계,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p>아 돌 보 이 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으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광역지원센터: 관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및 수급조정,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을 위한 업무지원 ■ 교육기관운영: 아이돌보미 교육(양성·보수·법정)기관 운영 및 관리 ■ 돌봄지원창출: 육아·돌봄의사가 있는 자에게 교육지원,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연계사후관리: 서비스모니터링(현장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예방, 연계활성화 방안 강구 ■ 아이돌봄서비스 : 이용자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 연계에 의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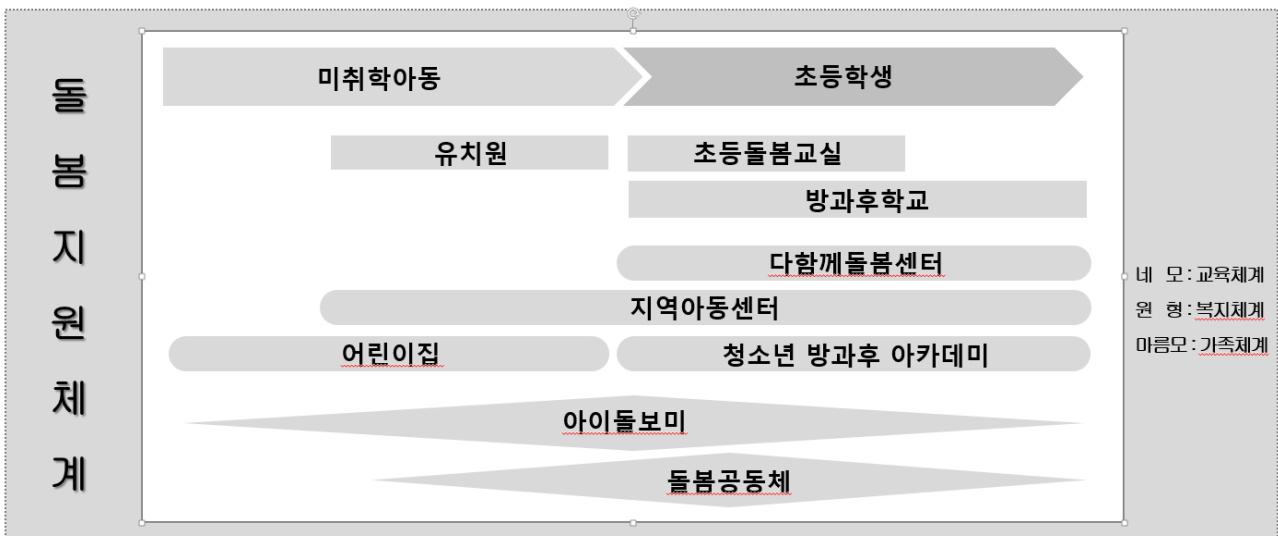
2 문제 분석

○ 부처별 분절적, 중복적으로 운영되는 돌봄 지원 정책

한국의 돌봄 정책은 저출산 정책과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으로 단기간에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지만 아동 중심이라는 관점의 미비하고 돌봄의 질적 격차 등의 한계가 있음. 현재 돌봄 정책 현황은 영유아 돌봄 서비스 지원

과 초등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나뉘어 돌봄 지원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처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임. 부처 간 사업은 정책 대상 범위와 서비스 내용이 유사하나 운영방식과 전달체계는 달라 대상자의 연령은 중첩되고 서비스의 질적 격차, 재난 시 긴급 돌봄 미비 등의 한계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 광역 및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돌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 정책을 도모하고 있으나 협의체의 운영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본래 취지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부처별 돌봄 지원 정책 -



○ 돌봄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

사회적으로 아동돌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돌봄인력을 바로 세워야 함. 아동돌봄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임에도 우리나라는 돌봄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여기며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음. 돌봄종사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유인하지도, 장기근속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열악한 근무 조건하에서는 아동돌봄인력의 소진을 유발하기 쉬우며, 이직이 많아 업무의 연속성, 경력연결의 불인정 등이 생김.

돌봄종사자들의 다수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타 사회복지기관 근무 경력이 있지만 경력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열악한 복지제도에 놓여 있음.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의 경우에도 교통비 실비지급 중단 등 처우가 지역별로 상이함. 또한, 여성가족부 지침은 선임 이상 오래 일할수록 보건복지부의 임금과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으로 서비스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가족센터 직원도 처우가 낮음.

○ 편견과 차별이 심각한 사회 구조로 어두운 돌봄의 미래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개별 가족들이 느끼는 편견과 차별은 여전한 상황임. 전 국민의 50%이상이 한국사회의 차별이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젠더, 학력, 장애, 지역, 연령 등에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함. 다문화 실태조사 결과 다문화 가족 차별 경험은 결혼이민자의 경우 30.9%, 자녀의 경우 9.2%를 경험하였고 한부모 가족의 약 16%가 차별 경험이 있다고 나타남. 노인에 대한 청장년층의 부정적 편견은 90%에 달했고, 젠더 갈등은 국민의 71%, 특히 20대는 90%가 심각하다고 답함. 이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젠더에 대한 수용성과 감수성의 부족으로 문화별, 세대별, 성별 갈등이 발생하는 것임. 또한 1인 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에 따른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로 사회적 고립 문제, 정서적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서로를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신뢰하며 사는 통합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 관계 맺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지만 현재 문화별, 세대별, 성별 집단 간 접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대전광역시 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에 따라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1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32개 사업 총 38만 회기의 프로그램과 돌봄지원을 진행하였음. 돌봄을 위한 공간운영으로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이 있음. 이는 돌봄을 함께 하기 위해 유아동 자녀와 부모님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작년기준 약 5,000여명이 이용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함.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이지만 문화별, 세대별, 성별 등 다양한 가족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을 제공할 수 없는 공간적, 위치적 제약을 갖고 있음.

○ 분절된 돌봄정책의 통합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프로세스 구축

돌봄 정책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서로 다른 재정으로 운영되는 교육체계와 복지체계, 가족체계 내에서 각각의 전달체계를 통해 돌봄이 제공되면서 유사·중복의 문제와 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그러므로 돌봄체계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지자체에서 해야함.

지자체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의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춘 돌봄 수요와 공급 현황 등을 고려한 상태에서 지역 중심의 정책 설계가 수립되어야 함.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체계 내에서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부처 간 협력적인 돌봄서비스를 계획·지원하고 돌봄을 총괄·조정 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함.

○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돌봄종사자의 노동특성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욕구충족이 우선되는 타자지향적 노동이며, 타인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정서적 교감을 필요로 하는 이타적 노동임. 그러므로 아동돌봄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인정은 돌봄종사자의 노동권 뿐 아니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의 사회권 보장의 전제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대전시는 고무적으로 2022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호봉제를 도입하여 아동돌봄의 일선에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함. 이러한 처우 개선이 모든 돌봄관련 종사자에게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적용하여야 함.

지자체에서는 돌봄 서비스의 질과 종사자들의 처우에 있어서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현실적인 돌봄 종사자를 위한 정책개발을 해야 함. 따라서, 질 높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돌봄종사자의 업무와 역할을 규정 할 수 있는 자격관리, 아동돌봄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함.

○ 다양한 가족(문화, 세대, 성별)이 어울려 서로 돌보는 소통·교류 공간 조성

접촉이론에 따르면 집단 간 접촉이 많아질수록 외집단에 대한 편견이 감

소함. 서로를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신뢰하며 사는 통합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집단 간 관계 맺기가 중요함. 특히, 서로 다른 집단 간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은 구성원들 간 신뢰를 높이고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게 함.

가족센터는 모든 계층과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폭 넓은 서비스 범위와 다양한 복지기능을 포괄하고 있음. 현재 각각의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 가족 교류 공간, 청년 교류 공간, 노인 교류 공간, 공동육아나눔터, 아동놀이 공간의 기능을 통합하여 한곳에서 어울려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 이 절실하게 필요함. 가족센터에 연령간, 세대간, 문화 간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소통·교류 공간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다양한 가족이 소통하고 교류하여 시민 모두 함께 돌봄에 참여하여 사회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여야 함.

아동이 행복한 나라, 아동이 행복한 마을

[지역아동센터대전지원단]

1 기관 개요 및 현황

○ 기관현황

1. 기 관 명: 지역아동센터 대전지원단
2. 개 소 일: 2011년 1월
3. 종사자수: 6명(단장 1명, 팀장 1명, 사회복지사 4명)
4. 기관 사명과 비전



○ 주요사업

1.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컨설팅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3. 지역아동센터 평가지원
4. 지역아동센터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조사·연구, 홍보
5. [대전시특성화사업] 초록펜 특기적성 강사 지원사업(45개소, 345명)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사업] 경계선지능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 (40개소, 192명)

○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현황(2022년 7월 기준)

1. 지역아동센터 기관현황

구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	계
개소 수	26 (18%)	37 (26%)	30 (21%)	26 (19%)	22 (15%)	141 (100%)

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구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	계
아동 수	681 (18.5%)	931 (25.3%)	752 (20.5%)	710 (19.3%)	604 (16.4%)	3,678 (100%)
미취학	9	18	20	0	14	61 (1.6%)
초등학생	503	649	584	535	459	2,730 (74.3%)
중학생	145	201	126	157	109	738 (20.1%)
고등학생	23	63	22	18	22	148 (4.0%)
학교밖	1	0	0	0	0	1 (0.0%)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현황

구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	계
종사자 수	58 (18.3%)	81 (25.5%)	68 (21.5%)	60 (18.9%)	50 (15.8%)	317 (100%)
시설장	26	37	30	26	22	141 (44.5%)
생활복지사	32	44	38	34	28	176 (55.5%)

2 문제 분석

- 온종일 돌봄 체계는 방과 후 아이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과 같은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정책.
-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나 돌봄서비스 주체의 다양성으로 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간 칸막이 현상이 심해 서비스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인 상황임.

- 보건복지부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내 추진과제로 「아동기본법」 제정 계획을 발표함. 아동기본법 제정으로 아동정책의 이념, 목표, 아동의 핵심권리 등을 규정하여 아동관련 개별 법률을 포괄하고 분절적인 현행 아동법제를 재편함과 동시에 보호아동, 일반아동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아동중심’의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하고자 계획됨. 또한 아동을 보호와 교육, 돌봄의 대상으로 보던 기존의 관점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써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호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전달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포함되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에서 운영하던 공부방을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음. 뿐만 아니라 아동자치회와 아동권리교육 등 아동권리 옹호의 장이 되고 있으나,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낮은 인정 수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3 필요 개선안

- 아동돌봄 서비스의 주체가 촘촘한 아동돌봄 체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학교와 마을, 그리고 마을 내 다양한 방과 후 돌봄기관 간의 연계와 조정을 통한 협력이 중요. 온종일 돌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각 기초자치단체별 지역성을 반영한 온종일 돌봄 협의회 구성이 필요.
- 아동중심의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과 함께 아동의 권리 실천에 있어 시군구별 지원 역량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 단위의 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하여 전달체계 확보가 필요함.

-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적절한 처우개선과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아동권리의 옹호자로서 전문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종사자 교육 지원이 필요함.

대전형 아이돌봄 지원체계와 제안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손·오·공]

1 기관 개요 및 현황

- 설립목적 : “함께 키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대전형 아이돌봄 실현”
통합적·전문적인 대전형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원스톱 돌봄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유·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돌봄기반 조성
- 설립근거 : (20. 6. 10 개소)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제3항, 대전광역시 아이돌봄지원조례 제7조(원스톱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종사자수 : 9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7명)
- 주요사업 : 대전시 아이돌봄 네트워크 구축사업
 - (통합돌봄정보 제공) 대전형 아이돌봄 통합정보플랫폼 대전아이 구축 및 운영
 - (돌봄서비스 질적제고) 돌봄서비스 매뉴얼 개발, 돌봄활동가 양성 및 파견, 온돌연구회
 - (마을돌봄 활성화) 주민자율형 돌봄 거점온돌방 조성사업
 - (공동육아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소규모돌봄공동체 발굴 및 지원
 - (양육자 역량강화) 양성평등 돌봄교육, 상호작용놀이교육, 양육자상담등
 - (지역사회 네트워크) 대전시 돌봄기관 MOU 및 간담회, 돌봄자원 연계등

2 문제 분석

- 아동돌봄 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각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부처별 아동돌봄사업을 동시에 펼치고 있어,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명칭이 상이하고 각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정책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관리하여 일원화가 안되고 있음. 서비스 이용

자의 관점에서는 혼란을 느낄 수 있으며, 돌봄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전달 및 안내 부재로 돌봄서비스 이용에 어려움 있음.

- 대전시는 공공육아정보 및 분절된 돌봄기관정보 통합제공으로 양육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온라인 돌봄정보망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전형 아이돌봄과 관련된 통합정보플랫폼(대전아이)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돌봄기관(330기관), 체험놀이 장소(400곳), 최신 양육정보 등이 제공되고 돌봄기관의 예약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음. 현재 238,330명의 방문자가 돌봄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자 신청과 관련하여 부처별 돌봄기관 간의 협력 및 연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돌봄서비스신청 채널(메일, 전화, 방문, 정부24, 행복 e음등)의 통합이 필요함.
-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이하 아동은 149천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음. 이 중 영유아기 아동의 경우 91%가 공적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 초등학생은 방과 후 돌봄 기관 이용하는 학생이 13,469명으로 16.3%정도 이용. 가장 수요가 높은 초등돌봄교실의 수요공급차는 19천명으로 추정되며, 초등학생의 공적돌봄의 공급 부족한 실정임(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 범국민초등돌봄수요조사).
-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돌봄위기 상황에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공적돌봄의 사각지대에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돌봄체계의 개선방안이 필요함.
- 공적돌봄의 틈새 최소화와 마을주민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돌봄문화를 확산함으로써 모든 아이가 지역 돌봄공동체 내에서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민자율형 돌봄의 거점온돌방 조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21년 7개소에서 22년 15개소로 확대하여 초등돌봄뿐만 아니라 공간이 없는 돌봄공동체에게 공간을 제공하여 돌봄공동체의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돌봄공동체 발굴과 육성의 과정에서 돌봄공간의 부족이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돌봄공동체의 돌봄공간의 임대료, 공과금 등의 돌봄공간 유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거점온돌방 11개/15개 개인부담). 지역의 공유공간은 모든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특성이 있어 아동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돌봄공간으로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중앙부처별 분산된 돌봄서비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격차가 크게 발생되고 돌봄인력의 과중한 업무환경(약 아동 10~12 명, 종사자 1명)

도 서비스 질 하락의 우려가 있음. 따라서 돌봄서비스 평준화를 위한 메뉴얼 개발과 돌봄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돌봄영역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적용 및 확산하여 부처별 돌봄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따라 대전시는 돌봄활동가 양성 및 파견(찾아가는 배달강좌)사업을 통해 아동 발달과 놀이를 기반으로 한 돌봄활동가 양성매뉴얼을 개발하고 경력단절된 여성을 대상(일자리창출 기회)으로 매뉴얼을 적용하여 80시간의 기초-심화-전문과정을 통해 약 100명의 돌봄활동가를 전문가로 양성하였음. 양성된 돌봄활동가는 대전지역의 돌봄기관 및 돌봄공동체에 파견되어 돌봄시간내 주제별 놀이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돌봄의 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돌봄프로그램의 참여아동이 증가하고 놀이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21' 25,956명, 4.92점/5점. 22' 34,082명, 4.93점/5점) 22년 예산상의 한계로 돌봄기관의 수요(640기관)에 따른 공급(423기관)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임.

3 필요 개선안

- 대전형 아이돌봄 통합정보제공을 위한 협력체계 및 서비스신청 채널의 통합
 - 대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돌봄체계구축을 위한 통합정보제공의 기능 강화
 - 대전시가 주도하는 부처별 아동돌봄 거버넌스 구축으로 협력체계 마련
 - 분절된 돌봄서비스 신청 채널의 통합 필요
- 주민자율 돌봄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돌봄공유공간 마련
 - 마을 유희·저활용 공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활용 방안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돌봄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주민참여의 공간 확대
 - 공간유지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자체, 기관 등의 지원체계 마련
- 돌봄서비스의 질적향상과 평준화를 위한 구축된 자원 활용의 지속성 필요
 - 아동의 성장에 따른 돌봄의 연속성과 돌봄의 질적 제고는 매우 중요
 - 돌봄활동가 돌봄자원 활용하여 돌봄기관의 수요에 따른 예산 확보

민선8기 대전 돌봄 정책 방향

[대전광역시 복지여성특별보좌관]

1 대전시 정책 현황

- 다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
- 대전형 아이돌봄[온돌]네트워크
- 다함께 돌봄 센터
- 아이돌봄지원사업
- 그 외 돌봄 관련 운영 지원

2 민선 8기 돌봄 공약

- 저소득 한부모 가정 가사지원 서비스 추진
- 장애인 긴급돌봄 지원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 지역사회통합돌봄 [행복동행] 사업추진
- 2~13세 아동의 미래희망 성장사다리 사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미래환경 조성
- 어린이집 장기재직휴가지원